

원전 사고 이후 담론과 ‘전후’ 문학의 비교 고찰*

-오오카 쇼헤이의 문제의식을 참조하며-

우 연 희**

(e-mail : redmoon1206@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무책임의 체계 |
| 2. 대국화 지향 | 4. 나오며 |

キーワード: ‘戰後’(‘post-war’), 原發 事故(nuclear plant accident), 大岡昇平(Ooka Shohei), 文学(literature), 大國主義(great-power chauvinism), 無責任(irresponsibility)

1.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 1-4호기가 지진에 의해 손상을 입고, 쓰나미로 인해 비상용 전원이 손실됨으로써 냉각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는 핵연료의 노심용해와 수소폭발을 잇달아 발생시켰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어 광범위하게 비산하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다.¹⁾ 사고 후 도쿄전력과 정부, 전문가들은 안전하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²⁾ 한편 1945년 8월 6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39291).

** 건국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1) 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2011), 임경택 옮김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p.7.

일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숨겼다. 처음에는 신형폭탄이라고 하였다가 일주일여가 지난 뒤 원자폭탄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³⁾ 사실 은폐라는 점에서도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의 모습은 1945년 원폭 투하 이후 일본의 모습과 중첩된다. ‘전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핵’이라는 키워드로 그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명징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핵의 공격적 사용으로 맞이한 일본의 패전과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덮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는 다른 듯 닮아 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옥음방송’을 기점으로 전전과 전후로 나누듯, 현재의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 이로 인한 원전사고를 촉발한 3.11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해되고 있다. 3.11 대지진과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일본사회에서는 두 갈래의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탈 원전 운동의 평화주의 담론과,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우경화 노선을 통한 외국과의 영토분쟁과 평화헌법 9조 개헌 시도, 집단적 자위권 인정 노력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패전 후 전쟁 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성장기를 지나 다시금 예전의 부흥과 영화로움을 그리워하던 전후 일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3.11이 텔레비전으로 보여진 광경을 보고 종전의 모습을 떠올렸다.⁴⁾ 패전 후와 3.11 이후의 일본의 모습이 중첩된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정명(2016)은 2011년 3월 16일에 헤세(平成) 천황이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이는 1945년에 있었던 쇼와(昭和)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연상시키는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진재 이후의 폐허

2) 日本の報道は権力側の発表を批判することなく『安全だ』と報道してきた。上杉隆・鳥賀陽弘道(2011) 『報道災害【原発編】』, 幻冬舎新書, p.54. (김유영(2017), 「일본 미디어의 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련 어휘 선정 및 구사에 관한 연구-후쿠시마와 타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p.150, 재인용) 이 논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일본의 메이저 4개 신문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의 원전사고와 확연히 다른 어휘 및 표현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신문 미디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보도’, ‘사실의 규명 및 전달’, ‘시민의 안전’과 같은 가치보다 ‘사회 안정’, ‘패닉 방지’, ‘불안 확산 저지’ 등의 목적을 우선하여 ‘국민반응’, ‘뜬소문’, ‘유언비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의 전달을 억제하거나 취사선택하여 보도하는 등 ‘억제보도’, ‘통제보도’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향재(2011) 「일본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패전(2) -원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4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188.

4) 辻井喬(2012) 「<3·11>から考えたこと」 『民主文学』 No.555, p.143.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전후의 폐허 그 중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상기시켰다.⁵⁾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는 3.11 이후 자신이 쓴 글과 무라카미 류(村上龍), 아즈마 히로키(東浩紀)의 글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논조가 같아 ‘이 풍경은 본 적이 있다. 전후와 같다’, ‘전후는 지금 끝났다’, ‘여기에서만 일본의 미래는 시작된다’라는 3세트”⁶⁾였다고 말한다. 진재 이후와 원자폭탄 투하로 종결지어진 패전 후가 닮아있다는 의견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구, 부흥과 관련되어 여기에서 다시 일어선다, ‘힘내자! 일본(がんばろう! 日本)’과 같은 슬로건도 전후와 닮은꼴이었다.

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 2013), 김정희(2014), 김태경(2014), 최가형(2014) 등을 들 수 있는데 진재 이후의 문학 작품 『신(神様) 2011』(2011), 『상상 라디오(想像ラジオ)』(2013), 『그래도 3월은, 또(それでも三月は、また)』(2012)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⁷⁾ 원전 반대를 표방해 온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전후’에 대한 인식과 원전 사고를 둘러싼 태도의 유사함을 분석한 연구가 눈의 띈다. 오에는 패전 후 다수의 일본인이 전쟁의 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후’라는 말을 다시 들고 나와 “정말로 그런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러한 그의 전후 인식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싼 그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원전 정책을 비판적으로 맞서는 주체적 태도를 요청한다.⁸⁾ 오에의 이러한 ‘전후’ 인식은 ‘전후’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한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메시지와 맥을 같

5) 심정명(2016)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日本學報』 No.106, 한국일본학회, p.52.

6) 高橋源一郎 · 開沼博(2012) 「対談「ポスト3・11」を描く—こぼれ落ちる現実を見つめて」 『文学界』, p.153.

7) 진재문학과 재해문학에 대한 연구는 木村朗子(2013), 『震災後文学論』, 青土社; 박유미(2016)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문학의 치유와 재생 담론」 『인문학연구』 104권; 김보현(2015) 「동일본대진재와 다와라 마치의 3.11가집-진재영에서 자연영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62; 김정희(2014) 「3.11을 인식하는 문학의 방법- 『신(神様)』에서 『신(神様) 2011』로의 개작」 『日本學報』 101; 김태경·나카자와 다다유키(2014) 「3.11 동일본대진재와 문학」 『世界文学比較研究』 48; 최가형(2014) 「3.11 동일본대지진과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가미사마 2011(神様 2011)』」 『日本學報』 98; 최가형(2015) 「3.11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진재문학과 마이너리티-원전사고와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2; 최가형(2016)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 재난문학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을 들 수 있다.

8) 홍진희(2015)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핵문제 이해」 『日語日文学研究』 Vol.95 No.2, 한국일어일문학회, p.293.

이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3.11 이후에 발표된 진재 및 원전사고를 다룬 문학을 대상으로 3.11 이후의 문학의 의미 및 역할, 그에 담긴 목소리를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연구 속에서 패전 후의 풍경과 원전 사고 이후의 풍경이 유사함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3.11 이후와 ‘전후’가 어떻게 닮아있는지를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와 ‘전후’의 담론을 ‘전후’ 문단의 축으로써 활발한 비평 및 창작 활동을 하였던 오오카 쇼헤이의 ‘전후’ 인식을 참조하여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2. 대국화 지향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을 강타한 진도 9.0규모의 강진은 최대 40미터가 넘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은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입었다. 미디어에서 ‘패전’과 나란히 이야기될 정도로 ‘전후’의 일본을 경계 짓는 사건이었다.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65년 동안, 이것은 일본에 닥친 가장 거칠고 가장 어려운 재난이다”라고 말하였다.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진재와 그 후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는 일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일본인들에게 던졌다. 이후의 일본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탈 원전, 평화주의, 평화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쪽과 원전 유지, 우경화, 평화헌법 개헌을 노력하는 기득권 쪽으로 나뉘었다.

탈 원전·반 원전을 주장하는 문학자들 중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를 들 수 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라는 거대한 ‘이물(異物)’을 일본 사회는 껴안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3·11 이후의 일본 열도 사회를 보면 확실하다고 말한다. “극렬한 핵폭발인 원자폭탄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조용한 핵분열인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을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⁹⁾고 주장한다. 가와무라의 발언은 일본의 전전(戰前)과 ‘전후’를 경계 짓는 사건이었던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도 핵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며, 일본사회를 방

9) 川村湊(2013) 「反原発と原発推進の文学」 『地震・原発文学論』, インパクト出版会, p.63.

사능의 위험에 빠뜨린 원자력발전소 역시 핵분열로 인해 가동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한다. 단지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원자폭탄의 피폭보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제어하기 어렵고 두려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사실 일본에서는 3.11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 이전에도 문학자들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 1982년 2월 '핵전쟁의 위기를 호소하는 문학자 성명(核戦争の危機を訴える文学者の声明)'이라는 제목의 성명에 고령의 대가부터 중견, 신진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자 2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구상에는 현재 전 생물을 살육할 수 있는 핵병기가 개발되고 있다.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구의 파멸을 의미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들은 각국의 지도자, 책임자에게 모든 국가, 인종, 사회체제, 사상을 뛰어넘어 핵병기 폐기를 위한 새로운 군비 경쟁 즉시 중지를 요청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경험한 우리들은 지구가 핵전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인류를 향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¹⁰⁾

문학자들의 서명 운동의 요지를 살펴보면 핵병기, 핵무기로 촉발되는 핵전쟁을 우려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와 같은 핵을 이용하는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패전 이래로 일본을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인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와 같은 논점은 가와무라 미나토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문학자들이 원자력 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대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해 혹은 원수폭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문학'이라 칭하는 장르의 존재가 있을 정도로 몰두해왔던 일본문학자들도 같은 핵분열 현상의

10) 「平和のため すぐ行動を 文学者287人が反核アピール」 『朝日新聞』, 1982.2.2.

발기인인 나카노 고지(中野孝次),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를 비롯하여 서명자에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 혼다 슈고(本多秋五), 노마 히로시(野間宏), 오오카 쇼헤이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필자의 줄임임.)

응용이자 이용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¹¹⁾고 지적한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문학자들과 지식인들은 탈 원전과 반 원전 운동을 펼쳤다.

이에 반해 여전히 원전을 용인하는 쪽은 평화헌법 개헌 의지를 표명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이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라는 사실이 총리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할런지도 모르겠다.

현재 일본은 대국화를 꿈꾼다. 과거 침략사실을 부정한 아베 신조 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에 대해 “전후 점령시대에 점령군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본이 진정한 독립을 되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기본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은 아시아 주변국을 침략했다가 패전한 일본에 부과된 ‘전후 체제’의 상징이다. 이를 위해 헌법 9조에서는 군사력 보유와 교전을 금지시켜 놓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이 조항을 삭제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후체제를 극복했다는 상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이다. 아베는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하고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를 합리화하는 발언과 함께 한국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임명한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 회장은 위안부는 어디에나 있었다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과 공영방송 수장의 발언은 기존 일본의 자학사관을 벗어나자는 ‘탈 자학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베를 위시한 정치인들은 일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정책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역사 인식 면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부정하는 수정주의 입장을 취하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고 있다.¹²⁾ 이러한 정치권의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다.

11) 앞의 책, 川村湊(2013), p.76.

12) 정치희(2016)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의 방송 내용 규제 논리와 NHK 우경화 논란」 『동아연구』 제35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144.

평화헌법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고도경제성장기를 겪으며 패전의 기억을 잊어가던 1960년대에 메이지 백년을 앞두고 유신사 선전에 나선 체제 측과 유사하다. 오오카 쇼헤이는 경제 부흥에 이은 1960년대 일본사 붐에 대해 “전쟁이 끝났다는 의식이 침투하여 일본민족의 과거를 뒤돌아보자는 기운이 촉발된 것¹³⁾”이라고 분석한다. 오오카는 「역사소설의 문제」에서 1960년대를 이렇게 회고한다.

1960년대 역사 붐은 아직 우리들의 기억에 새롭다. 안보투쟁의 좌절과 경제 고도성장으로 초래된 대국의식과 그에 따른 역사회고 분위기와 함께 각종 ‘일본 역사’가 큰 판매를 보였다. 메이지 백년을 지향한 체제 측의 선전에 따른 유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략)

나는 당시 나의 주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푸른 이리』는 칭기즈칸의 무제한 정복과 살육의 정당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밑줄 인용자)

오오카가 지적한 “경제 고도성장으로 초래된 대국의식”은 분명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대국화 지향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1960년대는 지금의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체제(정부) 측의 선전과 의지는 유사하다고 하겠다. “메이지 백년을 지향한 체제 측의 선전에 따른 유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지적은 점점 전쟁을 잊어가고 화려했던 과거의 일본을 그리워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당시 오오카는 중간소설로서의 역사소설에 대한 비평을 하였는데, 이는 『푸른 이리(蒼き狼)』를 둘러싼 논쟁¹⁵⁾으로 이어진다. 오오카와 이노우에 야스시

13) 大岡昇平(1965) 「歴史と推理」『産経新聞』, 1965·3·8 夕刊, 「歴史小説の可能性」『大岡昇平全集 16』, 筑摩書房, 1996, p.194.

14) 大岡昇平(1974) 「歴史小説の問題」『文学界』, 『大岡昇平全集16』, 筑摩書房, 1996, p.548.

15) 『푸른 이리 논쟁』은 이노우에 야스시의 역사소설 『푸른 이리(蒼き狼)』(1960)에 대한 오오카의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1961년 1월부터 『군조(群像)』에 「상식적 문학론」이라는 제목으로 12회에 걸쳐 오오카의 평론이 실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푸른 이리』는 역사소설인가—상식적 문학론(1)—」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가 2월에 「자작 『푸른 이리』에 대해서—오오카 씨의 「상식적 문학론」을 읽고—」(『群像』, 1961·2)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전개하고, 이에 오오카는 「칭기즈칸의 비밀—상식적 문학론(3)—」(『群像』, 1961·3)에서 이노우에를 비판한다. 이 둘의 논쟁을 지켜보던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가 『요미우리신문』에 평론을 실으면서 다시 한 번 오오카와 설전이 오고간다.

(井上靖)의 논쟁은 역사소설 속의 사실(史實)의 변경 허용도 문제가 초점이었다.¹⁶⁾ 오오카는 그 당시를 “역사가는 역사소설에 관대하였고, 소설은 우선 재미있으면 된다, 사실의 변경은 소설가의 임의”¹⁷⁾라고 여기는 때였다며 사실의 변경, 왜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아시아를 정복하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던 일본인들이 전쟁과 패전의 경험을 잇고, 또 다시 새로운 승자의 이야기인 『푸른 이리』에 열광하던 ‘전후’ 일본 사회를 비판한 것이다.

『푸른 이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오오카가 사료에 충실한 역사소설 『덴추구미(天誅組)(1974)』¹⁸⁾를 쓰던 시기는 1960년 안보투쟁을 경계로 국가의 주체가 될 기회가 사라진 ‘국민’이 대중소비사회 속의 ‘시민’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이다. 1960년대 역사소설 붐은 일본정부의 메이지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 1968년 10월 23일에 거행된 메이지 100주년의 기본 이념은 아래와 같다.

「메이지 100년을 기념하다」

1. 메이지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과 고양의 시대이다. (중략)
2. 이 100년간 우리 국민에게는 세계를 고무시킨 장거(壯舉)도 있는가 하면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과오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인들이 쌓아올린 기반이 정치, 경제, 문화 그 밖 모든 면에 이르러 얼마나 위대하고 견고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이번 대 전화(戰禍)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기적이라며 경탄해 마지않을 정도로 급속히 부흥하고 번영한 일본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잘 말해주고 있다. (중략)
3.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고무시켜 온 ‘구미(歐米)를 따라 잡고 넘어서자’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되었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돌이켜 보지 않았던 동양적, 일본적인 좋은 점이 재평가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¹⁹⁾

16) 오오카는 모리 오가이의 역사소설 개념을 원용해서 베스트셀러 역사소설 작가인 이노우에가 ‘역사적 감각’이 없음을 무섭게 비난한다. 그러면서 “역사소설은 역사에서 벗어나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사람은 역사에 충실함으로써 비로소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7) 앞의 책, 大岡昇平(1974) 『歴史小説の問題』, p.533.

18) 오오카 쇼헤이의 첫 번째 장편 역사소설이자, 막말 혼란기에 생성된 집단인 ‘덴추구미’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 문체의 불통일성이 보이는데, “집단적 행동은 자료의 이용이나 고증에 의한 사전체로, 개인적 행동만 회화나 심리의 묘사를 동반한 서사체”로 나타난다.

‘전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100년을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비약과 고양의 시대”로, 그 시기 선인들의 용기와 노력에 의해 근대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메이지 100년’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상반되게 과오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에서 ‘전후’에까지 이어지는 책임 회피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후’ 일본의 기본 이념이며 ‘메이지 100년’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²⁰⁾도 있었지만, 고도 경제성장기와 소비사회에 진입한 이 시기에 정부차원의 과거 회고와 매스컴의 역사 붐 조성에 따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1960년대와 현재 일본의 대국주의는 다른 듯 닮아있다.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와 현재의 경제 불황이라는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두 시대의 일본은 과거의 화려한 시기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물론 2010년대의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을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와 현재 일본의 대국주의는 차이가 있다.

3. 무책임의 체제

전쟁에 대한 망각은 일본인의 역사의식과 연관된다. 프랑스의 일본사가 미셸 뷔에(Michel Vié)는 『일본사』에서 “역사는 일본에도 있지만, 일본은 역사적 시간 속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일본인의 의식에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은 항상 역사의 밖에 스스로를 위치지어 왔다는 의미이다.²¹⁾ 일본인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는 비단 외국학자만의 것은 아니다. 마루야 마사오(丸山真男)는 근대 일본의 정치시스템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²²⁾

19) 内閣総理大臣官房(1969) 『明治百年記念行事等記録』, 大蔵省印刷局, pp.34-35.

20) 도야마는 정부의 ‘메이지 100년’ 행사 중 하나인 ‘청년의 배’에 대해 “일본의 청년으로 하여금 근대화 100년의 역사가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 100년의 역사인 것의 역사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는 발전도상에 있는 인근 우방 제국(諸国)으로부터 지도와 원조를 요청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국가적 사명’을 믿도록 하고 있다.”라며 비판한다. (遠山茂樹(1968) 『明治時代』をどうみるか, 『文化評論』, 『遠山茂樹全集 4』, 岩波書店, 1992, p.325)

21) 오시마 히토시(2015) 「日本文学における歴史」 『日本語文学』 Vol.64, 한국일본어문화회, p.2.

김항(2012)은 전쟁책임의 망각과 흔들림 없는 부국강병 노선 유지를 피하던 일본 주류세력의 전후 복구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패전 직후부터 전개된 일본의 복구 정책과 담론이 전쟁책임에 대한 망각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통수권자였던 천황을 법적으로 면책했을 뿐만 아니라, A급 전범자인 기시 노부스케가 수상이 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부, 관료, 재계 인사들이 대거 전후 일본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냉전 대립에 힘입어 패전 후 일본은 손쉽게 전쟁 전의 국가위상을 회복해나갔다.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원자력 예산, 이듬해 성립한 원자력기본법은 이처럼 전쟁 전 기득권세력이 국가위상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핵심을 차지하는 정책이었다.²³⁾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위상 회복이 우선시되면서 ‘전후’ 처리는 일본의 절대 다수 대중의 침묵과 망각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전후’와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벌어졌다. 21세기 비극이라 불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사고의 최고 위험단계로서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와 동급 수준의 재앙이었다. 이러한 원전사고 이후의 일련의 사회 변화는 과거 패전의 기점이었던 원자폭탄 투하처럼 현대의 일본사회를 경계 짓는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다. 과거와 현대 일본사회를 경계 짓는 공통점 이외에도 두 사건은 책임문제를 둘러싼 공통항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은 역사적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역사와 같은 과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이누마 히로시(開沼博)는 ‘전후’의 원자력마을 생성 구조에 대해 지배-복종의 연쇄 속에서 어떤 사회집단을 분리시켜 폭력성·위험성·착취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떠밀어서 고정화시킴과 동시에 은폐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성장이 달성될 수 없었던 상황을 지적한다.²⁴⁾ 이러한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지배의 구도’는 원자력마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를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침략전쟁과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이용, 파괴하였던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모습과 중첩된다.

22) 마루야마 마사오(2003) 『일본의 사상』, 한길사, p.96.

23) 김항(2012) 「계몽의 한계와 대중지성의 전개 -3·11 이후 일본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 『창작과 비평』 Vol.40 No.2, 창비, p.414.

24) 가이누마 히로시(2011)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역사비평』 No.97, 역사비평사, p.191.

경계점으로서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 체계적인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동일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후'의 시작이었던 원자폭탄 투하와 현재의 일본은 이등분하는 원전사고, 양쪽모두 핵분열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이후 후쿠시마는 '후쿠시마(フクシマ)'로 한다. 왜 '후쿠시마'로 가타카나 표기를 하는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히로시마·나가사키'와 같이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인종의 존속=미래에 관련된 심각한 사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가 세계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얼마나 큰 사고였는가는 사고 직후에 그 규모의 크기와 심각성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미국이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80킬로미터 이내에 사는 자국민에 대해 "즉시 피난하라"고 명한 것으로 상징된다. (중략)

단지 그러한 외국(인)의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에 비하면, 사고를 일으킨 원전을 경영하는 도쿄전력이나 정부의 대응은 이미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일시방편'이고, 사고 시점부터 얼마동안은 가능한 사고의 진실=사실을 '은폐'한 채로 폭풍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는 것같이 보였다. 그것은 또 '후쿠시마'가 일어나기 전에 54기의 원전을 이 '좁은' 일본열도에 만들어왔고 계속해서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던 나라(정부)나, 그러한 국가 방침에 추종해왔던 '원자력마을'의 주민들, 즉 원전이 초래하는 '이권'에 모여든 정치가, 관료(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 등), 전력업체(재계), 및 도쿄대학 공학부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어용)학자, 그리고 정부가 말한 대로 원전추진정보를 흘린 매스컴, 그 누구 하나 '후쿠시마'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무책임체제'와 모순된 관계와 다름 아니다.

그러한 '원자력마을'의 '무책임' 체질로 상징되는 이 나라의 상태는 작년 말 중의원의원 선거에서 '후쿠시마' 이전과 같이 원전을 용인·추진하려고 하는 자민당이 압승한 것이 여실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2년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가 잊혀지려 하고 있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²⁵⁾ (밑줄 인용자)

25) 黒古一夫(2013) 『文学者の「核・フクシマ論」—吉本隆明・大江健三郎・村上春樹』, 彩流社, pp.7-8.

위 인용문에서 ‘무책임체제’라는 말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만들고 운영, 연구해왔던 정부, 정치가, 관료, 학자, 마스크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어 구로코는 문학자들이 ‘반 원전’ 목소리를 내며 쓴 『지금 나는 원전에 반대합니다(いまこそ私は原発に反対します)』(平凡社, 2012)를 읽고 “1945년 8월 6일과 9일의 히로시마·나가사키로부터 시작되는 ‘핵(피해)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침묵’으로 원자력의 평화이용=원전을 허용해왔던 ‘가해’ 책임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²⁶⁾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가동, 운영에 직접 관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책임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은 패전 후 최초의 황족 내각인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迩宮稔彦王) 내각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1945년 8월 15일 쇼와 천황의 ‘종전조서(終戰詔書)’ 발표는 전쟁의 주관자였던 천황을 전쟁을 끝낸 은혜자의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지배층은 사실상의 ‘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라는 말로 ‘패전’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국민의 애국심을 천황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다.²⁷⁾ 이 내각이 직면한 최대 정치과제 중 하나는 국내에서 전쟁책임 문제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가로, 패전책임을 둘러싼 논의나 정부가 군부뿐만 아니라 천황이나 천황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게 큰 문제였다.²⁸⁾ 1945년 8월 28일 수상은 취임 뒤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패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답 (생략)우리나라의 패전의 원인은 전력의 급속한 괴멸에 있다. (중략) 거기에 참상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원자폭탄의 출현과 소련의 진출이 더해져 패전의 원인이 되었다. (중략) 또 모르는 사이에 정부, 관리, 군인 자신이 이 전쟁을 패전으로 이끌고 갔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중략) 그리고 국민 도덕의 저하도 패인의 하나로 생각한다. 즉, 군, 관은 절반은 공공연하게 또 민은 은밀하게 분별을 잃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나빴던 것도 있지만, 또 국민의 도의가 쇠퇴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26) 위의 책, 黒古一夫(2013) p.12.

27) 나카무라 마사노리 지음(2006), 유재연·이종욱 옮김 『일본전후사』, 논형, pp.26-27.

28) 요시다 유타카 지음(2004) 하종문·이애숙 옮김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p.40.

이 기회에 나는 군관민, 국민전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총참회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건의 첫걸음이자 단결의 첫걸음이라 믿는다.²⁹⁾

이른바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를 호소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가야 할 궁극의 목적인 국제수호, 민족의 명예 유지”, 즉 국제인 천황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전쟁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부와 동일하게 군관민, 국민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부 및 지도부의 침략전쟁에 대한 죄는 애매하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일본에서 자신의 전쟁 체험을 문학 활동의 보고이자 계기로 삼았던 오오카는 ‘전쟁의 진실을 외면하고 평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기만’³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전후의 일본은 전쟁 수습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관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까지 동일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람들은 원전 사고를 잊어가고 있다. 이는 원전사고 이후 많은 시민들이 ‘탈 원전·반 원전’의 메시지를 들고 데모에 나섰지만, 정작 201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탈 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풍화’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승자로서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들이 패전의 경험을 잊고 새로운 승자의 이야기인 『푸른 이리』를 지지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책임지지 않았던 ‘전후’에 대한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보투쟁의 뜨거운 열정이 신 안보조약 자동연장과 기시 내각의 총사퇴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경제성장의 영향 속으로 흡수되었던 것과는 동일하다.

4. 나오며

1945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로 전쟁이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전후’와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벌어졌다. 21세기 비극이라 불리는

29) 『朝日新聞』, 1945·8·30

30) 大岡昇平(1949) 『記録文学について』, 『新大阪』, 1949·12, 『大岡昇平全集14』, 筑摩書房, 1996, p.41.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사고의 최고 위험단계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원전사고 이후의 일련의 사회 변화는 과거 패전의 기점이었던 원자폭탄 투하처럼 현대의 일본사회를 경계 짓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중요한 기점은 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담론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두 역사적 사건들은 현재에서 ‘핵’·우경화·대국주의·무장 자위권 획득 등의 키워드와, 반 핵·평화주의·평화헌법 유지 등의 양극화 담론이 투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전후의 대중소비사회에서 보았던 일본국민들의 무의식적인 국가주의에 대한 영합이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과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지 못한 것도 그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권의 우경화와 3.11 이후의 원전사고로 촉발된 위기감을 점차 잊어가는 모습은 과거 1960년대 대중소비사회로의 진입과 일본사 붐, 대중소설로서의 역사소설의 유행으로 파악되는 ‘전후’의 모습과 닮아있다. 오오카의 ‘전후’ 일본을 향한 호소와 ‘메이지 100년’을 맞이하며 행해졌던 국가적 기념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일본에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가이누마 히로시(2011)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생각하는 전후 일본」 『역사비평』 No.97, 역사비평사, p.191.
- 김유영(2017) 「일본 미디어의 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련 어휘 선정 및 구사에 관한 연구-후쿠시마와 타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p.150.
- 김향(2012) 「계몽의 한계와 대중지성의 전개 -3·11 이후 일본 지식사회의 지형 변화」 『창작과 비평』 Vol.40 No.2, 창비, p.414.
- 나카무라 마사노리 지음(2006), 유재연·이종욱 옮김, 『일본전후사』, 논형, pp.26-27.
- 마루야마 마사오(2003) 『일본의 사상』, 한길사, p.96.
- 심정명(2016) 「3.11과 전후의 끝: 무의미한 죽음과 애도의 문제」 『日本學報』 No.106, 한국일본학회, p.52.
- 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2011), 임경택 옮김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p.7.
- 오시마 히토시(2015) 「日本文学における歴史」 『日本語文学』 Vol.64, 한국일본어문학회, p.2.
- 요시다 유타카 지음(2004), 하중문·이애숙 옮김,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p.40.
- 정지희(2016) 「200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의 방송 내용 규제 논리와 NHK 우경화 논란」 『동아연구』 제35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144.
- 정향재(2011) 「일본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패전(2) -원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 구』(4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188.
- 홍진희(2015)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핵문제 이해」 『日語日文学研究』 Vol.95 No.2, 한국일어일문학회, p.293.
- 『朝日新聞』, 1945·8·30
- 大岡昇平(1949) 「記録文学について」, 『新大阪』, 1949·12, 『大岡昇平全集14』, 筑摩書房, 1996, p.41.
- 大岡昇平(1965) 「歴史と推理」 『産経新聞』, 1965·3·8 夕刊, 「歴史小説の可能性」 『大岡昇平全集16』, 筑摩書房, 1996, p.194.
- 大岡昇平(1974) 「歴史小説の問題」 『文学界』, 『大岡昇平全集16』, 筑摩書房, 1996, p.548.
- 川村湊(2013) 「反原発と原発推進の文学」 『地震・原発文学論』, インパクト出版会, p.63. p.76.
- 黒古一夫(2013) 『文学者の「核・フクシマ論」—吉本隆明・大江健三郎・村上春樹』, 彩流社, pp.7-8.
- 高橋源一郎·開沼博(2012) 「対談「ポスト 3·11」を描く—こぼれ落ちる現実を見つめて」 『文学界』, p.153.
- 辻井喬(2012) 「<3·11>から考えたこと」 『民主文学』 No.555, p.143.
- 遠山茂樹(1968) 「明治時代」をどうみるか」 『文化評論』, 『遠山茂樹全集 4』, 岩波書店, 1992, p.325
- 内閣総理大臣官房(1969) 『明治百年記念行事等記録』, 大蔵省印刷局, pp.34-35.

논문 투고 일자 : 2017. 06. 18.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要旨＞

原発事故後の言説と「戦後」文学との比較考察

-大岡昇平の問題意識を参照して-

禹妍熙

2011年3月11日、日本の北東地方を覆った地震と津波により、福島原発から放射能が流出した。事故の後、東京電力、政府、専門家らは、国民の危機感の安撫に腐心する一方、正確な情報を提供しなかった。放射能流出という原発事故以後の社会の変化は、1945年の長崎と広島に原爆が投下された後の戦後日本と重なる。日本政府が戦争補償など戦後責任をきちんと果たせなかったという点は、50年経った今にも変わりはない。さらに、右傾化する現在の日本は、戦後日本の1960年代の歴史ブームを髣髴させる。1968年に開催された明治100年記念行事への批判と戦後日本に対しての大岡昇平の警告は、2010年代の日本においても有効である。

A Comparison of the Discourse after the Nuclear Plant Accident
and 'Post-war' Literature
: Reference to the Thoughts of Ooka Shohei

Woo, Yeon-Hee

On March 11, 2011, a major earthquake and tsunami that penetrated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caused radioactive spills in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fter the accident, Tokyo Electric Power, government and experts tried to calm the public but did no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 series of social changes after the nuclear accident have similarities with post-war Japan after the atomic bombing in 1945. The government, which was not responsible after the war, repeated the same mistake after the radiation spill. In addition, the shape of Japan today, which is currently on the path of right-wing nationalism, is like postwar Japan. Ooka Shohei's warning about nationalism and the criticism of the 100th anniversary that was held in 1968 is also relevant in Japan today, as it is on a similar path right now.